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정부·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하천·홍수관리구역 제외 움직임 강력 반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입장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희용)는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움직임을 강력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강령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용 위원장과 피해 주민들은 이날 “천재지변도 아닌 정부의 용담댐 방류로 인한 용담댐 하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원인을 제공한 댐 운영자의 잘못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천재로 인해 발생한 사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개인들 간의 피해 분

쟁도 합당한 구제를 받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며 “하물며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없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주군전동으로 유명한 무주지역은 조상 대대로 농토가 없는 산촌지역에 대부분 하천을 주변으로 농경지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될 형편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피해 주민들은 “벌써 1년 4개월째 정부와 지역대표를 통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과 분쟁조정 과정에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보상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화합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피해 지역도 보상에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도 침수피해에 포함해 반드시 전체 보상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실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침대로 진행하면 무주군 신청금액(81억) 중 하천구역(30억)과 홍수관리구역(15억)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무주군 피해 주민들은 피해금액의 55% 가량을 보상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안전재난과 오휘동 과장은 “군은 그동안 힘들고 지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속하게 피해 보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을별 책임공무원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펼쳐 왔다”며 “군은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충분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주민들은 군청앞을 출발해 용담천국 사거리~폴마트 사거리~반딧불주유소~시장사거리~무주군청으로 돌아오는 시가행진도 펼쳤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 수변구역인 부남면과 무주읍 일대 289가구, 3,487건, 81억 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지난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주민 대표 개별 면담과 2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현지 조사와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주민요구 보상이 산출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움직임에 대해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갖고 강력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주군-군 산림조합,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협력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철수 무주군산림조합장은 12일 2022년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서를 통해 예산확보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효율적 이행,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지도 및 점검, 민원처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산림경영 시범사업 위탁 단체인 무주군산림조합은 설계·시행·감리 등 사업발주를 비롯해 경영계획 수립, 감독관 선임 및 관리감독,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맡아 진행해야

한다. 군에서는 사업승인과 사업비 배정, 개별 준공 등을 맡는다.

올해는 국비 19억 원을 지원받아 총 39억7천여만 원을 투입해 경제림 조성과 큰 나무 등 조림 25ha, 숲 가꾸기 1,520ha 등 모두 1,738 규모로 올 연내까지 추진된다.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은 지난해에도 조림과 숲 가꾸기 전체 사업을 무주군산림조합에 위탁해 1,775ha 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산림조합과의 위탁사업 MOU를 체결함으로써 전문성을 활용한 산림사업의 공공성 강화

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림사업 법 인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됐다”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경영사업은 무주군과 경영위탁업체인 무주군산림조합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20년 12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선정돼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조림, 숲 가꾸기 전체 사업을 무주군 산림조합에 위탁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사과산업 육성 총력

예산 30억원 확보... 경쟁력·농가소득 향상 도모

장수군이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수 사과는 지역내 농가면적이 1,000ha에 이르며, 군에서는 사과를 지역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주요품종인 홍로사과는 단기간에 수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사과 농가에서 고품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여러차례 호소했다.

이에 과수과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사과원 보급 ▲과원 규모화를 위한 신규과원 조성 ▲품종갱신 및 화상병 예방을 위한 노후과원 정비 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에 방을 위한 기저재 지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소작업차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미래형 다축과원 시범조성 ▲노지과수 피해 최소화 위한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 ▲일소피해 경감용 햇빛차단망 시범 보급 등을 통해 장수사과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사과 농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사과뿐만 아니라 과수분야 신속도입 창출을 위해 내재해형 연동하우스 보급 및 내부 시설을 지원하며, 배·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봉지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사업 희망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적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장영수 군수는 “기후변화, 인건문제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수 사과농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올해 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장수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공수의 위축으로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진안군은 12일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의 지속적 유지와 가축방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공수의 위축하고 본격적인 예방·예찰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위축된 공수의는 유동물병원 류경희 원장, 한들동물병원 한세희 원장, 팜그린동물약품병원 국경훈 원장 등 3명이다.

이들은 1년간 읍·면·동 배치지역의 가축사육 농가를 수시로 방문·예찰하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브루셀라, 결핵 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는 전염병 발 감수성 동물에 대한 예찰과 실시간 전염병 발생 신고접수 및 1차 확인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병 발생 시에는 신속히 현장에 동원되어 발생지역 내 살처분, 예방접종 및 예찰 활동을 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점검·이력제 특별단속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합동 점검반(공무원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2)을 구성해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 위생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등 적정 처리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냉동식품을 냉장식품으로 생산·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위반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준수 여부 등이며 유통단계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 등을 통해 계도하고 위생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이력번호 허위 기재 등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실시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안천면, 쓰레기 3NO운동 우수마을 시상

진안군 안천면(면장 김용호)은 12일 안천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쓰레기 3NO운동 우수마을 시상식을 가졌다.

안천면 16개 마을 중 인구 수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우수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최우수 3마을을 비롯한 6개 우수 마을에 상장과 시상품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쓰레기 3NO운동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을을 시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만들기에 더욱 앞장 서자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용호 면장은 “쓰레기 3NO운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안천면 만들기에 적극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임대인 모집

장수군이 관내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임대인을 모집한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농촌 활성화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 군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총 5개 동으로 물량 소진까지 신청가능하며, 사업신청 가능주택은 6개월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빈집 소유자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자부담 5%이상)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재생 후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입주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며 주거공간과 문화·예술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